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 탐색과 함의¹⁾

양성욱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1. 논의 배경

한국 사회 영·유아(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및 아동(만 8세 미만)을 위한 정책은 크게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시간제보육·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관련 지원은 서비스가 중심이었으나, 2018년 아동수당, 2022년 영아수당(2023년 이후 부모급여) 도입 이후 점차 현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최윤경 외, 2022).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과 유사한 맥락에서 광역 단위 지자체의 현금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전시는 2022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설하고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024년 현재 연령별 지원 금액 변동).

다만,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현금 지원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으로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양육 지원의 복잡한 관계를 통합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문정희·김성순, 2017; 최윤경 외, 2022). 이는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성 검증들은 다수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한국 사회의 현금성 지원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강지영, 2020; 김보름, 2021; 김이래, 2021).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 지원 정책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환류 과정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제시되는 현금 지원의 성과 중 양육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 관련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 검토 및 조사 설계

문헌 검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을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의 성과 관련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는 가구소득 및 가구소비 변화, 양육비 지출, 양육부담변화, 빈곤상태,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등을 성과 관련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강지영, 2020; 장인수·정찬우, 2022 외 다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기존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제도로 출산 관련 지표를 통해 그 효과성을 탐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2022년부터 시행)를 고려할 때 분기 혹은 연 단위 지표인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금 지원의 일차적 목적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양육 관련 지출 증가를 통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출과 전체 소득 중 양육비 부담의 비율(이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유해미 외, 2021).

조사 설계 및 연구 모형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고는 대상군과 비교군을 설정하여 두 집단 간의 자녀 양육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에 대전시 거주 0~7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대상인 0~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인 3~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대전시 0~7세 자녀가 있는 가구 즉, 모집단의 비율은 0~2세 36.9%, 3~7세 63.1%로 비례표본추출은 대상

1) 본고는 2023년 수행한 정책과제〈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을 요약한 것임. 조사 설계, 설문 내용, 분석 결과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가구를 과소 표집할 가능성이 있어 비비례표본할당표본 추출을 활용하였다²⁾.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2023년 8월 7일~8월 31일까지 약 4주간 개별방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총 295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조사 내용은 전반적인 양육현황을 파악하고자 영·유아 및 아동의 인구 학적 특성, 주양육자,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비율, 양육 스트레스, 자녀 양육비, 양육지원정책 경험 등 자녀 양육 관련 사항과 대전형 양육수당 관련 문항 등을 포함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양육 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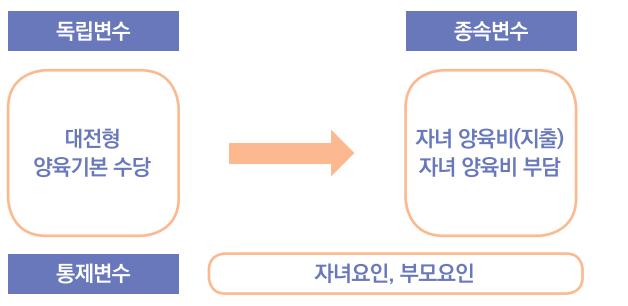
표 1. 변수 구성

구분	정의 및 측정 방법	
독립변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1, 비대상=0
종속변수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자녀별(어린이집/유치원+공교육비+사교육비+돌봄비용+식비+양육용품비+보건·의료비+문화생활비+기타)총합/자녀 수]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비/가처분소득 × 100
통제변수	자녀요인	자녀 수, 첫째 자녀의 연령
	부모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가구원 수, 주거 소유 형태

분석 방법

먼저, 대상 집단(0~2세 자녀 가구)과 비대상(비교) 집단(3~7세 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였고, 자녀 요인(자녀 수, 첫째 자녀의 연령), 부모 요인(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을 통제변수,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를 독립변수로 자녀 양육 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 탐색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부담 차이

먼저,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집단의 자녀 양육비는 평균 71.26만원, 비대상인 비교 집단은 평균 57.63만원으로 대상 집단이 더 많았고($t=5.3257$, $p<.001$),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로 산출한 자녀 양육비 부담은 대상 집단이 17.63%, 비대상(비교) 집단이 12.60%로 대상 집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6425$, $p<.001$).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을 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분산 분석 결과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을 때 양육기본수당 대상 집단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더 많았으며($F=22.98$, $B=-48.32$), 자녀 양육비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7.71$, $B=-48.32$). 즉 가구소득이 증가 하면 자녀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감소함을 고려 하였을 때, 대상 집단이 비대상(비교)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비 지출이 더 많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에 미치는 영향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 양육비에는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4년제 이상 대학졸업자가($b=.186$, $p<.05$),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b=.266$, $p<.0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집단이 비대상(비교)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207$, $p<.05$).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 수록 자녀 양육비 부담이 낮고($b=-.142$, $p<.05$),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자녀 양육비 부담이 낮았다($b=-.548$, $p<.001$). 반면,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았고($b=.189$, $P<.01$), 대전형 양육기본 수당 대상 집단은 비대상(비교)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b=.154$, $p<.05$).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으나,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영·유아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영·유아 권리보장 증진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 실제 조사대상은 대상군 52.9% 과 비교군 47.1%로 조사되었음.

4. 정책제언과 과제

본고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본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제한적인 차원의 지표에 초점을 두고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이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 획단이 아닌 종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심층적인 효과성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양한 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대상 연령에 대한 검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산지원금에서 확대된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 수당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 출산율 재고뿐만 아니라 생존권, 발달권 등 영·유아의 권리증진 측면이 중요하다. 본고의 분석 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부분 영·유아 관련 소비로 지출되며,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전 양육기본수당이 영·유아 권리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정책 시행 시작 시기인 2022년과는 다르게 2023년 이후에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화하면서 0~1세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이 증가한 만큼,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액에 대한 검토

본고의 분석 결과 대전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지출 증가 효과가 있지만,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지출에 비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현금 지원 지급액의 증가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돌봄 부담 완화 지원 결합 방안 검토

본고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육 부담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0~2세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의 주양육자는 모이며, 부에 비해 양육 시간이 더 길고, 양육 부담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주양육자(모)의 영·유아 돌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중심 시간제 보육(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더불어 전반적인 영·유아 대상 돌봄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간제 보육,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추가적 지원이나 대상 기준 확대(현재 맞벌이, 한부모 등), 시간제 보육 인력 확보, 6~12세 대상 거점온돌방 등의 돌봄서비스를 영·유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지영(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1호, 63-87.

김보름(2021), 아동수당이 개별가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이래(2021),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정희·김성순(2017), 부산시 결혼·출산 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유해미 외(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01.

장인수·정찬우(2022),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과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305-325.

최윤경 외(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08.